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이후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공론화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기술했다.

‘신고리 재개’ 결론, 탈원전도 과감히 정리를

신고리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왔다. 다행이다. 8월 말~9월 초 1차 조사 때 ‘재개(36.6%)’와 ‘중단(27.6%)’이 9%포인트 차였던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져 최종 19%포인트 차가 났다. 이번 공론화로 초래된 손실만 1000억원이다. 원전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신규 원전 포기,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의 탈원전은 고수하겠다고 한다. 공론회에서 향후 ‘원전 축소’ 의견이 53.2%로 ‘원전 유지’(35.5%)와 ‘확대’(9.7%)를 합한 것보다 8%포인트 높았다는 이유다. 나라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탈원전 소동은 평지풍파다. 탈원전은 새 정부가 들고나오기 전까지 국민적 이슈가 된 적이 없다. 새 정부는 처음엔 주로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위험’의 근거로 든 것은 대부분 틀린 사실이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었다. 당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지만 일본 동해안 여섯 단지 원전 18곳 가운데 지진으로 원자로나 격납 건물이 손상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123층 롯데월드가 규모 7.5 지진을 견디게 설계

됐는데 신고리 5·6호는 철근 밀집도가 롯데월드의 20배라고 한다. 안전이 문제라면서 가장 안전한 3세대 원전인 신고리 5·6호기를 못 짓게 하겠다고 나선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다.

탈원전 측은 ‘위험’ 주장이 먹히지 않자 ‘원전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방향을 바꿨다. 원전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기적적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지난 5년간 우리는 연평균 1600억달러의 에너지 연료를 수입했다. 이 중 원전 원료인 우라늄 수입은 0.5%인 8억달러에 불과했다. 이 0.5%의 연료 수입액으로 전력의 30%를 공급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33년간 소비자 물가는 274% 상승했는데 전기 요금은 49%만 올랐다. 원자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1990년대 말 IMF 때 환율 급상승으로 모든 물가가 올랐지만 원전이 버텨주는 바람에 전기료는 끄떡없었다.

탈원전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 발전을 늘린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설비가 국내 기술인데다 수입 연료비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준(準)국산 에너지다. LNG 발전은 수입에 의존하는 연료비 비중이 72%나 된다. 국제 정세가 항상 평화로운 게 아니다. LNG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은 러시아의 변덕에 수시로 홍역을 치른다. 탈원전은 에너지 명줄을 다른 나라에 맡겨버리는 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연구 개발해야 할 분야이기는 하나 우리 자연조건에서 이것으로 전력의 20%를 감당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위험한 발상이다. 탈원전 측은 신재생 확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주장한다. 전력 생산의 효율(效率)이 낮아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일손이 많이 드는 것뿐이다. 농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트랙터를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신재생은 국민 세금을 보조금으로 쥐 키워가는 산업이다. 원자력으로 값싼 전기를 생산해야 신재생에 보조금을 줄 여유도 생긴다.

반도체처럼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정밀 산업도 원전이 지탱해주는 안정적 전기가 떠받치고 있어 가능한 것이다. 영국, 체코 등에 원전을 수출하면 한국 젊은이들이 외국 가서 최고 수준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다.

원자력이 사양(斜陽) 산업이라는 것도 왜곡이다.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이 59기, 발주되거나 계획 잡힌 게 160기, 검토 중인 것이 378기나 된다. 원전 가동 31국 가운데 독자 모델 원전을 수출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등 6국뿐이다. 독일 영국도 못 한 일이다. 원전은 자동차, 조선, IT와 함께 한국이 세계 수준 기술력을 가진 분야다. UAE 원전 수출은 쏘나타 100만대 수출과 비슷한 경제 효과라고 한다. 우리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50년 노력해 일군 원자력 산업을 내다 버리겠다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이념을 위한 정부다.

탈원전은 ‘모 아니면 도’ 식의 위험한 정책이다. 석탄, 가스, 신재생, 원자력 등 에너지원(源)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장단점을 잘 조합해 예측 어려운 국제 질서 변화나 과학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에너지 믹스(mix)를 완성해야 한다. 신재생에 몰두하는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은 선(善)이고 원자력은 악(惡)’이라는 환경 운동권 도그마에 사로잡혀

국가 미래를 놓고 도박을 벌이는 것이다. 개인이 자기 재산을 갖고 모험하는 것은 본인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놓고선 그 누구도 함부로 도박을 벌여선 안 된다. 정권 임기 후에 재앙이 닥쳤을 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신고리 공사 재개 결론이 났지만 복잡한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의 단기간 공론화로 결판 짓는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고난도 수학 문제를 여론조사로 풀 수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탈원전 문제가 정치화했다는 사실이다. 지지 정당별로 탈원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일 자체가 합리적 이성적 결론을 낼 수 없게 뒀다는 뜻이다. 정부는 탈원전을 종교 교리와 같은 도그마로 만들어선 안 된다. 과감하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고리 외에 다른 새 원전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장기 정책을 결정할 전문가 위원회로 하여금 에너지를 검토하게 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 길로 갈 좋은 기회다.

- <조선일보> 사설 2017-10-21

집단 지성 발휘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가름할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활동을 끝내고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석 달간 공론조사와 합숙토론 등을 진행하며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다소 의외다. 그동안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공사 재개와 중

단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471명의 시민참여단 사이에 공사 재개 의견이 현격하게 높았다. 참여단이 찬성과 반대 양 진영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경제성과 환경, 안전 사이의 균형을 숙고했음을 알 수 있다. 네 차례의 공론조사 동안 공사 재개 의견이 갈수록 높아지고, 젊은 층의 반대가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이 이를 방증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반대 분위기가 강조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할 만큼 성숙했다는 증거다. 앞으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대통령 공약에 대한 그간의 사회적 인식도 바꿔놓았다. 정치권은 그동안 ‘대선 공약에 들어 있으면 국민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인식 아래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과정을 무시해 왔다. 그 결과 적지 않은 갈등과 후유증이 초래되곤 했다. 하지만 대선 당선은 곧 모든 공약에 대한 국민적 승인을 의미할 수는 없는 법이다.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런 공약을 정책으로 옮길 땐 국민적 합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남겼다. 이런 사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질 것이다. 집권 당시의 공약보다 정책 실행 때의 민심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늘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많은 우려가 기우에 그치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2조80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날아가거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기요금도 오르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선 원

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해외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자기 모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그렇다고 공사 재개 진영이 마냥 환호할 일은 아니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데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40%에 이르렀다.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53%에 달했다. 원전에 대한 근원적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투명하고 부패가 심했던 원전 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반영된 결과는 아닌지 공사 재개 진영은 되돌아봐야 한다.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투명하게 원전을 운영하는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전문가의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납득시키는 겸손함도 필요하다. 그래야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측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건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다. 정권 교체 직후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는 갑자기 2015년 113.2GW로 내다봤던 2030년 전력수요를 지난달 100.5GW로 크게 낮췄다. 물론 증가일로였던 에너지 수요가 최근 고령화와 산업구조 재편으로 침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달로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하지만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이 오락가락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면 어떤 에너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이 분명해져야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야 원전 건설을 축소하고 노후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정책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탈원전 정책 자체의 폐기로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여기

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46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또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을 실험한 것치고는 값비싼 비용이다. 하지만 미래를 염두에 두되 현실을 잊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찬반양 진영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 <중앙일보> 사설 2017-10-21

文 대선공약 거둬들인 시민 참여단의 “신고리 건설 재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정부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 40.5%보다 19.0%포인트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정책 권고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됐던 당초 여론조사와 달리 건설 재개가 큰 차이로 앞선 것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결론을 내렸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한 대목에서 시민참여단의 성숙한 고민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보존한 것이나 한국 원자력 산업의 숨통을 트는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대신 공약을 깨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된 사회적 갈등은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다. 당장 환경단체들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수십 년 동안 온 국민이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나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애초부터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30% 가까이 진행된 공사를 대통령 공약이라며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급격한 정책 추진이 문제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이번 결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라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건설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와 달리 설계용역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와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 삼척 또는 영덕에 지을 예정이었던 원전 2기도 백지화됐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서 원자력과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가 균형 있게 분포하는 에너지 다변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도 급격한 방식이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수급 전망, 기후변화 대응, 원전 수출 경쟁력과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전망까지 감안해 체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싶다면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이 큰 신규 원전 백지화보다는 노후 원전 조기 폐로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국가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로드맵부터 설정해야 한다.

- <동아일보> 사설 2017-10-21

신고리 5·6호기 짓되 '탈원전'하자는 게 국민 뜻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라고 20일 정부에 권고했다. 시민대표 참여단이 한달간 숙의 과정을 거쳐 투표한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설계수명이 60년인 5·6호기 공사 재개는 앞으로 탈원전이 2082년 이후에나 가능함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아쉽지만, 공론화위원회가 핵발전 정책 방향을 '원전 축소'쪽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사회단체 모두 이런 '공론'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전력 에너지 정책은 선택이 매우 어렵다. 당장은 핵발전이 가장 경제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핵 발전을 선호하게 한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관리·처분의 길이 보이지 않고, 한번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치명성 탓에 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렵다.

이번 공론조사는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여론조사와는 성격에서 차이가 크다. 사적인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매우 귀중한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커다란 상황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공론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둘러싸고 학습과 토론을 거치자, 판단을 유보했던 시민대표들 가운데 55%가 공사 재개로 생각을 바꿨고 '건설 중단'의견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20% 정도가 '공사 재개'로 돌아섰다. 5월 말 기준으로 종합 공정률이 28.8%에 이르고, 새로 짓는 원전이 노후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이 공사 재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 5호기

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에 준공한다. 5·6호기가 가동에 들어가면, 다른 노후 원전을 조기 폐쇄할 수 있는지 정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단은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53.2%가 '원전 축소'의견을 냈다. '원전 유지'의견은 35.5%, '원전 확대'의견은 9.7%에 머물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격적인 원전 확대 정책은 옳지 않다고 판정한 셈이다. '원전 축소'의견은 국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9.2%였으나, 같은 의견 분포로 출발한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4차 조사에서는 53.2%로 높아졌다. 핵발전에 대해 알고 숙고해가는 동안 '탈원전'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정부나 전력업계, 대중매체에 의해 확산된 원전 관련 정보가 그동안 '원전 추진'쪽에 편향돼 있었음을 시사한다.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보의 유통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은 노후 원전의 문을 닫고 새 원전은 짓지 않는 것으로, 매우 느슨한 방식이다. 앞으로 60년 이상 일관되게 이어가야만 실제 탈원전이 이뤄진다. 이번에 시민대표로 참여한 이들의 숙의 과정이 국민 사이에도 확산돼,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

-〈한겨레〉사설 2017-10-21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확인한 공론조사 확대하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숙고 끝에 내놓은 결론에 모두가 승복했다. 낯선 제도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갈등 해소와 시민참여의 새로운 길을 연 것이다. 시민참여단과 공론 결과를 흔쾌히 수용한 일반 시민 모두에게 찬사를 보낸다.

시민참여단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나무랄 데 없는 숙의민주주의를 보여주었다. 일반 시민들이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책이라는 전문적 영역을 다루면서 합리적 토의가 가능할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닌지 등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토론을 진행할수록 원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높아졌고, 마침내 공론조사의 결과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서 정부에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할 만큼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견해가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의미다.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은 지역, 세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의사결정 방식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전문가 참여가 배제돼 의미가 없거나 의회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 결정권을 맡긴 것은 대표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오히려 집단적 이익에 매몰된 전문가들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것도 공론화위의 성공에 기여했다.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면 공론화위는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받아 시민참여단이 승복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개인의 견해와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이해도 침해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다. 갈등하는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공론조사 방식을 적용해 풀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정치참여, 국정참여라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일부 야당은 공론화위가 권고한 원전 축소를 되돌려야 한다

는 억지주장까지 했다. 정치권은 공론조사 방식에 시비를 걸 자격이 없다. 여야는 시민참여단이 보여준 성숙한 토론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소할지 자성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 <경향신문> 사설 2017-10-21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 확인한 공론조사 실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한 공론조사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실험이었다. 공론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회적 갈등을 시민들의 논의로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숙의(熟議) 민주주의’의 효과를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시도였다.

당초 우리에게 생소한 공론조사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참여한 사회 갈등을 일반 시민의 숙의로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정부가 아닌 공론조사로 갈등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반론이 존재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론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원전 문제가 모든 시민의 뜨거운 논쟁거리도 떠올랐다. 세대와 계층, 이념을 넘어선 공감의 자리였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도 “어깨가 무거웠지만 즐겁고 행복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극심한 갈등 끝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일상사였던 상황에서 공론조사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실감했다.

논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사전 준비작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했기 때문에 종종 혼선과 갈등을 빚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 모두 편향성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도할 가치가 충분한 작업이었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다.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토론과 합의로 갈등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공론화는 의의를 갖는다.

공론조사는 그동안 세계 20여 국에서 70차례 이상 진행됐다. 당장 난제로 남아 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부터 공론조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위를 계기로 사회적 갈등을 시민들 논의로 푸는 공론작업이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 <한국일보> 사설 2017-10-21

‘신고리’ 건설 재개 권고 이젠 국론 통합해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조사가 결국 공사 재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즉각 공론조사 권고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 석 달여간 중단됐던 신고리원전 건설 공사도 조만간 재개된다. 초대형 국책사업에서 사상 처음 시도된 이번 공론조사는 참여한 찬반 갈등 속에 석 달여라는 비교적 긴 여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무엇보다 공론조사가 상징하는 속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기제로 접목될 가능성을 보인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이를 놓고 시민들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모습을 보인 점은 한층 성숙한 민주정치

의 새 면모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공론조사 참여단 구성과 조사 방식, 정보 검증 등을 놓고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이는 개선 과제이지 공론조사 무용론을 뒷받침할 장애물은 아닐 것이다.

자칫 더 큰 혼란을 낳을 수도 있었던 공론조사가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담은 결과물을 낸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사 재개’59.5%, ‘공사 중단’40.5%라는 시민 참여단 471명의 분명한 결론에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던 원전 반대 진영은 아쉬워하면서도 승복할 뜻을 밝혔다. 재개나 중단 어느 쪽 결론도 내리지 못했을 경우 벌어질 혼란과 갈등을 생각하면 천우신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공론조사위원회의 공과 과를 함께 지적할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는 어디까지나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과 중단에 참고할 판단을 구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참여단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역시 여기에 국한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 측은 설문에 원전 정책의 향배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까지 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원전 축소 53.2%, 원전 유지 35.5%, 원전 확대 9.7%라는 응답을 끌어냈다.

언뜻 보면 폭넓은 의견 수렴과 균형 잡힌 결론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시민참여단에 중대한 결정에 대한 심리적 타협을 유도하는 장치를 제공한 결과로 봐야 한다. 조사위로서는 공여지책이었겠으나 정도는 아니었으며,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지금의 갈등을 확대시킬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대목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 대목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탈원전 반대 진영은 거꾸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심판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버리고 있다.

이제 원전 갈등의 작은 고비 하나를 넘었다. 공론조사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그 결론이 아니라 과정일 것이다.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두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 공론조사의 성숙한 갈등 극복 과정을 이제 우리 정치와 사회 전체가 체득해야 한다.

-〈서울신문〉사설 2017-10-21

평지풍파로 끝난 ‘신고리 공론화’... 탈원전 공약도 접어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지속 여부를 논의해온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건설 재개’였다. 59.5% 대 40.5%라는 19%포인트 차는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박빙이었음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기치를 높이든 후 정부 차원에서 중단 쪽으로 분위기를 몰았지만, 평지풍파만 일으키고 끝낸 셈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도 명분을 잃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문제와는 별개로 원전 축소·유지·확대를 조사해 각각 53.2%, 35.5%, 9.7%라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원론적 입장일 뿐 탈원전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 에너지 백년대계는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하고, 국회 등 국민적 동의를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을 통해 거대 국책사업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발상부터 무리였다.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8개월 간 심의 끝에 지난해 확정해 29.5%가 진척된 사업이다. 대표성은 물론 법적 지위도 없는 공론화위가 좌지우지한다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반(反)법치다.

원전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슬한 변수가 얽힌 복잡

다단한 사업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총동원해도 부족할 일을 문외한 471명에게 떠맡겼으니 이런 난센스가 없다. 공론화위 뒤에 숨은 정부는 무책임하다. 그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했다.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6월 27일 국무회의에 이어 작전하듯 밀어붙인 5·6호기 공사 중단은 법적 하자 논란을 자초했다.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공사부터 중단한 것은 정부 의중을 공개리에 알린 ‘하향식 공론화’일 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탈원전 정서를 대변하는 동영상도 올라왔고, 관련 부처의 기존 원전 홍보 자료는 사라졌다. 2030년 전력수요 예측은 대폭 낮춰 수정돼 원전 감축 논리를 뒷받침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은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소수의 환경론자가 주도했다. 전문가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이뤄진 공약이 국가 대계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저명한 외국 환경·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해왔다. 태양광·풍력은 한국 지형에 맞지 않고, LNG로 대체해도 추가 비용과 함께 에너지 안보에 역행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릴 탈원전은 친환경과도 거리가 멀다. 미국·유럽의 까다로운 품질 관문도 통과한 한국형 원전은 반도체 부럽지 않은 경제 자산이다. 기술력을 사장(死藏)시키고, 수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건 국의 자해(自害)다. 전기료 인상 등 국민 부담도 커진다.

원전은 가동 기간의 전후까지 생각하면 100년에 걸친 국책사업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논란은 있었지만 원전 중시 정책을 폈다.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집착하는 저의를 알기 어렵다. 정부는 졸속 탈원전 정책을 한시바빠 바로잡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사설 2017-10-21

‘탈원전 공론화’ 국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탈원전을 이유로 공정률 29.5%, 1조6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원전 공사를 세우고 공론에 부친 것 자체가 애초 무리였다. 국가 예산 46억원과 건설 참여업체 손실만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3개월의 시간과 엄청난 비용만 낭비한 꼴이다.

공론화 기간 동안 건설 중단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건설 재개 측은 공론화의 법적 근거를 일절 인정하지 않는 등 갈등이 계속돼 왔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찬반 양측의 정보도 잘못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 토론회는 편향성 시비로 얼룩지고 욕설과 고성이가 오가는 등 난항을 겪었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속에 원전 해외 진출도 차질을 빚었다. 20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가 무산될 처지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원전 17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사우디뿐 아니라 영국 베트남 체코 케냐 등 세계 시장에서 원전 수출 길이 막힐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방한한 미 마이클 셸러버거 ‘환경 진보’창립자는 그제 “케냐가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려다 러시아로 돌아섰고 영국은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컸는데 이제는 재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탈원전 영향으로 해외수출에 손을 놓은 탓이다.

정부는 어제 탈원전에 매달려 국론분열과 혼란, 원전 수출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내놓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권고안을 토대

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전부다. 이제부터라도 한국형 원전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과 주무 장관은 원전 수주를 위해 해외로 날아가 세일즈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세계일보〉사설 2017-10-21

진정으로 국민 위한 에너지 정책 제시해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사 재개를 권고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의 정책 권고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공식 의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의 결정은 첨예한 사안을 사회적 논의로 매듭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적 반목이 극심했던 뇌관을 합의의 틀로 제거했다는 것은 향후 유사한 사례를 해결하는 전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공론조사라는 수단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이권이 팽팽한 현안을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내야 하는지 교훈을 남겼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공론 과정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효능을 가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성과다. 이는 공론조사가 거듭될수록 공사 재개 비율이 높아졌고 20, 30대의 찬성 비율이 늘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조사 초기만 해도 전체적으로 공사 중단 의견이 많았고, 젊은층의 흐름도 이와 유사했다.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전 위험성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 제공, 지속적인 논의와 숙고 등의 공론조사 모델

을 통해 숙의가 가능해지면서 결과는 바뀌었다. 원전의 공포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팩트가 힘을 더 얻은 셈이다.

공론화위 결정 이후 또 다른 다툼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찬반이 극도로 갈려 후폭풍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태도가 우려스럽다. 공사 재개 결정을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건강부회식 해석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처신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할 뿐더러 국민들을 편 가르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국민의당 논평은 과한 감이 없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탈원전에 지나치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에서 원전 축소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탈원전 명분에 집착해서는 곤란하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동반 활용하는 식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론조사는 이기고 지는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진보와 보수를 규정하는 장이 돼서는 더욱 안 된다. 사회구성원 모두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차질 없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공론기간 3개월간 작업이 중단된 만큼 보완작업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한다. 공론조사가 완벽할 수는 없으나 현안을 국민들의 논의로 푸는 순기능이 있음은 확인됐다. 비싼 비용을 치르고 얻은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야겠다.

- <국민일보> 사설 2017-10-21

급진적 탈원전에 제동 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의견이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19%포인트 차이로 나온 점은 놀랍다. 20일 발표된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 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설명으로는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20·30대의 증가 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기로 한 만큼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고 중단됐던 건설 공사는 100여일 만에 재개 수순을 밟게 됐다.

시민참여단이 공사 재개에 손을 든 것은 국내 원전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하면서 1조6000억원의 비용을 이미 투입해 29%의 공정에 도달한 사업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더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유럽에서 신고리 5·6호기와 유사한 수출형 모델 EU-APR 표준설계에 대해 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시켜 한국 원전의 대외공신력이 인정된 점도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 듯하다.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경우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당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는 데 따른 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감안됐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모아진 공론화위 의견은 새 정부 들어 몰아치듯 추진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제동으로 봐야 한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축소(53.2%)가 유지(35.5%)나 확대(9.7%)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로 읽힌다. 정부도 탈

원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의 오해, 발전 방식과 조달 연료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탈원전 대신 에너지 전환이라고 바꿔 부르고 했지 않나.

신고리 5·6호기 외에 아직 계획이나 검토 단계인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원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신고리 5·6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2082년이 될 전망이다. 예정대로 탈원전을 추진해도 65년의 시간을 두는 것인 만큼 완만한 속도 조절이 요망된다.

공사 중단을 요구해온 반대파들이 공론조사 과정을 문제 삼거나 결과에 대한 불복운동을 벌인다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건설 중인 원전공사 중단 여부나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은 이념이나 정치색에 따라 찬반을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중장기 전력 수급계획 수립에도 작위적인 전망치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꼼꼼히 따지고 환경 보호도 감안해 세우질 국가의 백년대계여야 한다.

- <매일경제> 사설 2017-10-21

“신고리 공사 재개” 권고, 에너지정책 재검토 계기 돼야

신고리 5·6호기 공사 지속 여부를 가리는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59.5%) 응답이 중단(40.5%)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공론화위는 이에 따라 어제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자는 의견(53.2%)이 유지(35.5%)나 확대(9.7%)보다 월등히 많았다”며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라는 권고도 동시에 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된

원전은 계속 짓되, 향후 더 짓지는 말라는 모호한 결론이다. 공론화위 조사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시민 참여단 대상 설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워낙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을 의식한 공론화위는 슬그머니 향후 원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도 추가했다.

안타까운 것은 공론화위 권고 내용을 두고 각 과파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야 3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대(對)국민 사과, 탈원전 공약 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재개 결정은 존중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지지 여론이 높은 만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공론화위의 엇갈린 결론만 놓고 보면 양측 모두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라는 에너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식의 탈원전 정책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은 초기부터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에너지 전문가보다는 소수 환경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정작 원전 전문가들 목소리는 배제됐다. 객관적이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데이터로 원전 공포가 과장됐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작전 하듯, 원전 공사가 돌연 중단됐다.

환경·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앞다퉈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원전의 기술적 우수성과 안전성은 세계가 인정한다. 전문가를 총동원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서라도 국가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

- <한국경제> 사설 2017-10-21